

광주시, 지역미래 이끌 AI 인재 본격 육성

과기부·인공지능사업단, AI 직무 전환 교육생 400명 모집 AI 특화 맞춤형 교육 재직자·구직자 대상...전액 무료 지원

광주시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AI) 산업 인재육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사업단)과 함께 '2022년 AI 융합 프로젝트 교육' 참여 교육생과 기업을 모집한 데 이어 AI 직무전환 교육생 모집도 시작했다.

23일 광주시와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인공지능 산업 현장 인력 수요에 맞춘 AI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해 'AI 특화 맞춤형 교육'에 참여할 직무 전환 교육생 400명을 상시 모집한다.

'AI 특화 맞춤형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으로 함께 추진하는 인재양성 사업 중 하나로, 개인별 커리어 패스(직무 능력)에 따른 직무설계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AI 직무 전환 희망자의 직무능력 고도화와 AI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생의 역량·희망 직무 등의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교육과정을 매칭하는 직무설계 컨설팅 과정과,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생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교육 대상별로 입문 과정부터 초급, 중급, 고급 단계까지 맞춤형으로 기획되고, 비전공자 구직자부터 재직자까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재직자 교육생 과정은 야간 과정 (오후 7시 이후), 주말 과정 (전일제) 등 각 학습 프로그램 당 16~32시간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컴퓨터비전/영상처리 ▲자연어처리/음성인식/음성합성 ▲인공지능 실무 비즈니스 등의 프로그램 등이다.

구직자 교육생 과정은 월~금요일 (오전 9시30분

~오후 6시30분, 1일 8시간)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과정 (이론) 및 오프라인 집합 (실습)으로 이뤄졌다. ▲AI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과정 ▲AI모델링 컴퓨터비전 ▲AI모델링 자연어 처리 ▲AI 플랫폼 클라우드 ▲AI 비즈니스 등의 교육을 받는다.

AI 직무 전환 교육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http://www.aica-gj.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단은 앞서 지난 6월에는 인공지능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한 '2022년 AI 융합 프로젝트 교육' 참여 기업과 교육생도 모집했다.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재직자 및 구직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과 함께, AI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해 실습 중심의 오프라인 심화 교육을 준비했다"면서 "이번 AI 특화 맞춤형 교육을 통해 AI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재직자 및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앙·지방 평등한 협상 헌법 보장 지방정부 입법·재정·조직권 운영



독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니더작센주(왼쪽)대사관과 헤센주 대사관. 16개 주정부로 이뤄진 독일은 수도에 각 주정부 대사관이 있다. /공동기획재단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4> 독일 지방분권 선진국 사례

연방-주정부간 '조세 수입 배분'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 문화·교육 분야 등 자율권 강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시가 갈수록 심화되는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회사가 보유한 20여만 채의 주택을 몰수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유권자 약 56%가 주택 3000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 회사의 보유 주택을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전체 39%에 그쳤다.

이같은 결과가 가능한 이유는 지방분권에 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지방분권 역사가 오래된 나라다. 독일 국가 조직은 지방정부 없는 생각할 수 없다. 지방도 중앙과 평등한 협상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중앙이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없는 것이다.

특히 독일은 헌법을 통해 지방분권을 보장해 지방정부가 입법, 재정, 조직권 등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다. 헌법 개정부터 세율 조정까지 모두 주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독일의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이다. 연방 정부 아래 16개 각 주정부가 있다. 그 밑에 소단위 자치 조직이 자리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배분은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입법과 관련해 연방정부만 할 수 있는 것,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외교나 군사, 철도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 등은 철저히 개별 주정부가 책임진다.

주정부도 지방행정과 관련해 전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각 주안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

데'와 광역자치단체인 '크라이스' 등이 있다.

여러 게마인데가 합쳐진 상급 광역자치단체 성격인 '크라이스'는 게마인데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무 업무를 지원한다. 사회, 경제, 문화 등을 지원하며 게마인데와 다르게 조세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 공공시설 사용료나 수수료 등 수입과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지역 현안과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지역 사무실도 운영한다.

베를린 시의회 안스가 힌츠 언론홍보 대표는 "기본법에 의해 이 곳들에서 지역 자치가 보장되고, 각 지역 의회들이 현지의 자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결정하며 지방 자치를 통제한다"면서 "어떤 지역 내의 건설 계획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이고, 토지세 및 영업세에 대한 세금 인상율이 지역 의회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베를린에는 각 주정부의 대사관 위치해 있다. 연방국과 수도 베를린과의 중요한 정보 전달 및 입법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업무적인 협력 이외에도 자치분권을 균형적으로 유지시키는데는 재정적 면도 크다. 독일은 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및 조세 수입 배분을 명시했다.

독일의 지방분권이 오늘날까지 잘 유지해가고 있는 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원활한 행정적 업무 처리 방식이나 재정조정제도 등 법률 규정 때문만은 아니다.

안스가 힌츠 대표는 "독일 지자체 사례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라며 "정치라는 것은 적어도 지역 현안 문제가 있어서는 멀리 떨어진 수도에서 정치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닌, 집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국가를 지탱하는 정치는 아래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혜 논란' 첨단 3지구 개발사업 공공기여금 140억 합의

민간 사업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선정...추진 속도 낼 듯

특혜 논란 등으로 주춤했던 광주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이 공공 기여금 협상을 통해 속도를 내게 됐다.

23일 광주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최근 첨단 3지구 3공구 대형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공식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예상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14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광주전남연구원

평당 분양가 1254만원, 수익률 9.9%를 적용해 산정한 예상 수익금 1442억원의 10%기량이다. 공사는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주민, 입주기업 편의시설 등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의뢰한 1, 2공구와 함께 전체 사업을 오는 10월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도시공사는 예상했다. 첨

단 3지구 개발사업은 1조 6200여억원을 투자해 361만6000여㎡ 면적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3861세대 아파트를 개발하는 대형 개발을 하기로 했으나, 공모에 단독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사업 계획 적정성 검증, 공공기여금 협상을 진행해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과거사 진실규명 12월 9일까지 접수

지난달까지 15698건 접수

전남도가 지난 2020년 12월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접수하는 과거사 진실규명 마감 기한이 오는 12월 9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전남도, 시군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이송돼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가 이뤄지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달 말 현재까지 진실규명 신청 1만5698건을 접수했고, 이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1만153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남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접수 사건은 5515건이다. 접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3735건을 조사 개시한 상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농촌마을 체험하면 남도장터 할인쿠폰 드려요

전남도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9-12월 타 지역 도시민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민박 시설을 이용하면 최대 4만원의 남도장터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이같은 혜택은 쿠폰 발급 대상업소로 지정된 농촌숙박업소를 이용해야만 가능하다. 전남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민박 중 사업 참여를 바라는 숙박업소는 신청서를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 중 숙박료 할인을 지원받아 농촌관광을 체험하고 싶은 이용객은 우선으로 지정된 숙소 예약 후 시군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농촌숙박업소 소재지 시·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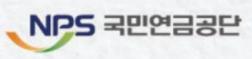
국민연금 덕분에
가족들 사랑이 커졌습니다

<김용호씨와 남원순씨의 딸 김지현씨>

든든한 국민연금으로
나의 걱정은 가벼워지고
가족의 행복이 늘어납니다

부모님의 행복에서 나의 행복까지

연결됩니다 행복한지금

국민연금